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2
----------	-----

제출연월일: 2015. 4.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1. 제안이유

법제처 선정 규제 개선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규정 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 시키고, 「지방세기본법」 제72조의 개정으로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의 공탁을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에 대한 처리 방법 중 공탁을 삭제  
(안 제18조)

- 채납세 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중복규정 삭제 (안 제19조, 제20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 정비(안 제25조)

- 담보제공 예외 규정 범위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위배 됨 (규제개혁 개선과제)  
⇒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

라. 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대한 기한 조정(안 제40조)

- 공고기간: 10일간 → 1개월간(상위법인 「국세징수법」과 일치)

⇒ 채납처분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세징수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76조, 제85조

제91조, 「지방세기본법」 제7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2015. 3. 5. ~ 3. 25.),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결과, 등록규제 감축(제40조제3항)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또는 그”를 “또는 성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구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때”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교부 또는 우편”을 “교부·우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부,”를 “교부·”로, “방법 으로”를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조례로 정하는 바란”을 ““(조례로 정하는 바”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각자 에게”를 “각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 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제공 할”을 “제공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를 “구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도”를 “대해서”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통지 하여야”를 “재통지하여야”로 한다.

제22조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영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를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압류하고자 하는”을 “압류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전이라 할지라”를 “전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자력”을 “재산·자금능력”으로 한다.

제29조 중 “날로부터 3월”을 “날부터 3개월”로, “3월”을 각각 “3개월”로 한다.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본문 중 “균등 한”을 “균등한”으로 한다.

제35조 중 “성실납부자란”을 ““성실납부자”란”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파산재산관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파산관재인”을 “파산재산관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를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공유재산”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규정하는”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관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반사항”을 “모든사항”으로 한다.

제45조 중 “인가결정되면 동”을 “인가결정되면 인가된”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통정한”을 “서로 알면서 한”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u>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u>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u>또는 성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u>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u>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u>구세</u> ----- ----- ----- ----- ----- ----- ----- ----- -----.

제7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  
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  
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  
기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 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  
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  
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  
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 으  
로 한다.

②·③ (생략)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  
는 바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  
·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  
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반장에 대  
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

제7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  
----- 시행에-----  
-----.

제9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의 연장) ① -----  
----- 받으려  
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 교부·우편  
-----  
-----.  
----- 교부· --  
----- 방법으로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조례로 정하  
는 바”란 -----  
-----.  
-----  
-----  
-----

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2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구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 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② (생략)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  
-----  
-----  
----- 각자에게-----  
-----.

② -----  
----- 대해서-----  
-----  
-----  
-----  
-----.

제1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공할-----.  
-----  
-----  
-----  
-----  
-----



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8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  
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  
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  
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채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  
용한다.

제19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  
한까지 구세를 완납하지 아니하  
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20조(구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  
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  
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  
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  
서는 영 제64조를 준용한다.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  
-----  
-----  
구금고-----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해서-----  
-----.

<삭제>

<삭제>

제21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구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3. (생략)

제27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

제21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재통지 하여야-----.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  
-----  
받으려는-----  
-----.

제25조(납세담보의 요구) -----  
-----  
----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  
-----.

1. 영 제8조제2항-----  
-----  
-----

2. 3. (현행과 같음)

제27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  
--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압류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연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 기간

2. (생략)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8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

하려는 경우-----

-----

-----.

-----

-----.

1. -----

-----

--- 대해서-----

-----

-----

---

2. (현행과 같음)

② ----- 압류하려는-----

-----

-----.

-----

-----

-----

-----

---.

제28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

-----

----- 전이

라-----.

-----

-----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구세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0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재산·자금능력 -----  
-----  
-----.

제29조(구세확정 전 보전압류) --  
-----  
-----  
-----  
-- 날부터 3개월 -----  
-----  
-- 3개월-----  
-----  
-----  
--.

<삭 제>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1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  
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  
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삭 제>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2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  
공무원은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  
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  
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  
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구청·주민센터의 공무  
원 중 2인 이상 또는 경찰공무  
원 1인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  
켜야 한다.

제33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  
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  
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

<삭 제>

제33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  
-----  
-----  
-----

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의  
채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  
하여야 한다.

제35조(채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  
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  
에서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 직  
전연도까지 연간 3건 이상(취득  
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  
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  
세 재산분에 한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  
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6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  
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  
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 균등한-----  
-----  
-----  
-----  
-----  
-----  
-----.

제35조(채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  
실납부자) -----  
---- “성실납부자”란 -----  
-----  
-----  
-----  
-----  
-----  
-----.

제36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  
구) 파산재산관리인에게 교부청  
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

1. -----  
-----  
-----  
----- 파산재산관리인-----  
-----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

2. -----  
-----  
따라-----  
-----  
-----  
-----  
-----  
-----  
-----  
-----  
-----.

제37조(공매) ① -----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의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구세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9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금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40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생략)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  
----- 대해서 -----  
-----  
-----  
-----  
-----  
-----.

제39조(배분방법) -----

-----  
-----  
-----  
-----  
-----, ----- 국유재산·공유재산 -----  
-----  
-----.

1. ~ 8. (현행과 같음)

제40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  
-----  
-----  
-----  
-----  
-----

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구보에 게재하거나 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2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

---.

③ -----  
-----  
-----  
----- 1개월간  
-----.

④ -----  
----- 지체 없이 -----  
-----  
--.

제42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  
-----  
----- 지체 없이 -----  
-----  
-----  
-----  
-----  
-----.

② -----  
-----  
-----  
-----  
----- 따른 -----  
-----.  
-----  
-----

아야 한다.

③ (생 략)

제43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45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채납액은 법령 및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생 략)

② 납세자가 채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  
-----  
-----  
-----  
----- 모든사항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  
----- 인가결정되면 인가 -----  
된 -----  
-----  
-----  
-----.

제46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p>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u>통정한</u>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p>	<p>----- ----- ----- ----- <u>서로 알면서 한</u> ----- ----- ----- ----- -----.</p>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임

#### 3. 미첨부 사유

- 법제처 선정 규제 개선 사항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 시키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함.

#### 4. 작성자

- 성동구 세무1과 염은주 (연락처 02-2286-5294)

## < 관 계 법 규 >

### □ 지방세기본법 제72조 [안 제18조 관련]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 국세징수법 제91조 [안 제19조 삭제 관련]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 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 □ 국세징수법 제76조 [제20조 삭제 관련]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안 제25조 삭제 관련]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안 제25조 삭제 관련]

제8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장제5절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안 제25조 삭제 관련]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국세징수법 제26조 [안 제30조 관련]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 국세징수법 제27조 [안 제31조 관련]

**제27조(질문권·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 □ 국세징수법 제28조 [안 제32조 관련]

**제28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 국세징수법 제85조 [안 제40조의 3항 관련]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5. 5. 1.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 4. 14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4. 14

다. 상정일자 : 2015. 4. 22

(제21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나. 제안이유

법제처 선정 규제 개선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규정 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 시키고, 「지방세기본법」 제72조의 개정으로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의 공탁을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에 대한 처리 방법 중 공탁을 삭제  
(안 제18조)

-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 나.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 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의 중복규정 삭제 (안 제19조, 제20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 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 정비(안 제25조)
  - 담보제공 예외 규정 범위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에 위배 됨 (규제개혁 개선과제)
  - ⇒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
- 라.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대한 기한 조정(안 제40조)
  - 공고기간: 10일간 → 1개월간(상위법인 「국세징수법」 과 일치)
  - ⇒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국세징수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76조, 제85조, 제91조, 「지방세기본법」 제72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2015. 3. 5.~ 3. 25.),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결과, 등록규제 감축(제40조제3항)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과 「국세징수법」의 개정조항과 규제 개혁개선과제를 반영한 안으로,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확대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체납 처분의 중지 공고 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 기간과 동일하게 1개월로 공고 기간을 조정하였음.
- 또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으로 여겨짐.

## **6.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 **7. 토론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